

혁명에 관한 이야기 - 4

시민혁명 prologue

글. 김인겸 역사문화칼럼니스트

시민의 탄생

많은 경우 용어를 정의하고 개념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논의의 출발이자 중심이다. 시민이라는 단어는 이와 연관하여 확장하는 여러 담론에서 개념 정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의 정의는 크게 보아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와 관련한 주제에 직접 닿아 있기 때문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뉘앙스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두 질문, ‘누가 시민이냐?’, ‘시민이 누구냐?’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는 것도 시민의 정의와 범위, 역사의 주체 설정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헤겔은 역사를 자유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 자유를 헤겔이 말하는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할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물질적인 차원에 중심을 둘지는 차치하고 다만 직관적으로 접근해보자. 아직 생산성 향상을 논하기 힘든 원시사회를 거쳐 금속기를 사용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국가의 꼴을 갖추어 사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유는 모두의 것이 아닌, 소수가 독점하는 특권이였다. 고대에 노예는 사람이되 사람이 아닌 존재였고, 전쟁이나 정복을 통해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이였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시민은 외국인을 제외한 자유민 남성에게 한정된 특권이였다. 여성도 시민이 될 수 없었다. 고대 로마에서 시민의 폭은 그리스의 폴리스보다 다소 넓어졌으나 고대라는 시대의 한계를 넘지는 못하였다. 로마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노예의 생산력에 의존하였다. 중세의 농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

았다. 농노는 기본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갖가지 납세의 의무, 노동력을 바칠 의무에 묶여 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고려와 조선을 거쳐 차츰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정치적 자유는 가지지 못하였다. 게다가 조세와 공납 등의 의무가 무거워 경제적 자유 또한 사실상 부재했다.



그림 1. 제단 너머로 투구와 방패를 받는 젊은이.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적생상토기

전근대에는 주인에게 인신이 속박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노비와 같은 존재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은 언제 처음 탄생했을까? 과거에도 시민은 존재했다. 앞에서 언급한 고대 그리스에도 시민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시민은 특권을 가진 소수에 가까웠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그리스의 시민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무장을 하는 군인으로서 의무와 참정권을 동시에 가졌다. 이는 근대적 개념의 시민이 등장한 이후에도 꽤 오래 지속된다. 시민의 기원은 중세 말 근대 초의 부르주아 계층의 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오랫동안 중세를 지배했던 장원의 자급자족 경제는 중세 후반 흑사병의 창궐, 교역의 확대 등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토지에 속박된 농민과 달리 부르주아 계층의 출신은 다양했다. 상공업에 종사하던 이들, 의술이나 법률을 다루던 전문가들 등 부르주아 계층은 일종의 중간계급으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했다. 이들은 처음에는 국가권력과 결탁하기도 하였다.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는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세금으로 건넸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은 절대왕정의 억압적인 중상주의와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다. 부르주아 계급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정치적 자유를 획득해야 함을 서서히 깨달았다. 이들은 점진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확장했으며 때로는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했다. 우리가 보통 시민혁명이라고 할 때 이는 17~18세기 유럽과 미국의 시민혁명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민혁명은 서구의 시민혁명과 유사하면서도 우리 고유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특수성도 많이 가진다.

중세 말 근대 초에 탄생한 근대적 의미의 시민은 그러나 현대적 시민에 비하면 소수의 특권층에 가깝다. 그럼에도 최초의 시민이 가진 근대성은 이후에 벌어질 시민 확대의 역사의 동인으로 작동한다. 근대적 부르주아 계급이 귀족과 구별되는 점은 폐쇄성 여부이다. 기존의 귀족은 혈연과 신분으로 자신의 특권을 폐쇄



그림 2. 루이 14세의 초상화

적으로 유지하려 한 반면, 근대 부르주아 계급은 귀족과의 투쟁 과정에서 동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시민이라는 지위의 보편성을 사상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부르주아 계급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진심으로 신봉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도, 초기 근대의 부르주아 계급이 내세운 평등에서 비롯된 시민 계급의 개방성은 결국 민주주의라는 사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시민혁명의 주체는 시민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민혁명의 주체는 부르주아 계급으로 일컬어지는 소수의 특권층 시민과 그러한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시민 모두였다. 처음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시민혁명의 주체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일반 시민의 참여가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시민이라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왜 혁명을 일으켰는가?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커질수록 자유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 1215년 6월 15일 영국의 존 왕은 귀족들의 강요로 한 문서에 서명했다.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 불리는 그 문서이다. 물론 당시에는 일반백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대헌장은 신체의 자유,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명문화하였다. 이는 군주가 신하를 마음대로 잡아 가두지 못하게 하고 신하의 돈을 제멋대로 갖다 쓸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귀족들끼리의 협약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부르주아 계급이 애초에 원한 것은 경제적 자유였다. 초기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이 필요로 했던 시장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자는 사상이다. 그러나 기존의 기득권 계급인 귀족과 성직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았다. 부르주아 계급은 결국, 정치적 투쟁에서 승리해서 사회의 판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음을 자각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국의 시민혁명은 자신들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정치·경제·사회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부르주아 계급이 내세운 가치는 보편적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였다. 영국은 여기에서 예외적인 측면도 보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시민의 보편성을 표방한 사상과 구호가 혁명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1788년 국고 탕진으로 궁지에 몰린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는 과세를 위해 내키지는 않은 삼부회를 150년 만에 소집했다. 자크 네케르는 계급의 대표성 등에 관한 의견을 사회 각계각층에 요청했고, 성직자(제1신분)인 시에예스는 이에 대한 답으로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를 저술해 프랑스 대혁



그림 3.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의사당에 전시된 1297년 판 마그나카르타(대헌장)

명이 일어나던 해인 1789년 1월에 이를 배포하였다. 이 팸플릿의 서두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은 무엇이였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무언가 되기를 원한다.**



제3신분은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다음인 평민, 시민을 지칭한다. 구체제(앙시앙 레짐)에서 제3신분은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한 존재였다. 시에예스는 제3신분은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제3신분의 보편성, 다수성을 의미한다. 시에예스는 당시까지 제3신분의 정치적 목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표현하며 그들의 정치적 권리의 부재를 지적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3신분이 무언가 되기를 원한다고 쓰며 그들이 정치적 주체성을 획득해야 함을 주장한다. 압축적이고 모호하기까지 한 시에예스의 선언은 많은 직군, 계층을 제3신분 안에 포괄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보편성을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인정하였다. 당시에 당장 관철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

리로 수용하는 1인 1표제에 근거한 평등선거와 일정 연령만 되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주는 보통선거의 이념은 시민의 보편성을 슬로건으로 내건 18세기 계몽사상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에 시민의 보편성은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하여 일반시민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성격이 강했으나 이는 차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자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믿음과 같은 뿌리일 수밖에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적인 존재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면 사람이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는 평등의 가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파시즘이나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가 비난받는 이유는 인간을 도구화하다 못해 생명마저 경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혁명의 주체는 시민인가?’라는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시민혁명의 주체가 처음부터 보편적 시민은 아니었을 것이다. 역사는 그 소용돌이의 와중에서는 주체들이 주체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혁명이 진행되면서 혁명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결국 주체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림 4. 자크 루이 다비드가 1817년에 그린 시에예스 초상



그림 5. 세 신분을 묘사한 중세 프랑스의 삽화, 왼쪽부터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기사), 제3신분인 노동자·농민(삽을 들고 있다)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보통 3대 시민혁명으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을 꼽는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편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셋을 왜 주요 시민혁명으로 정의하는지를 간단히 정리하며 마치려고 한다. 혁명은 보통 피를 뿌린다.

명예혁명은 한쪽의 큰 희생 없이 평화적으로 시민혁명을 달성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영국인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와 특정 시점에만 주목한 것이지 그 과정을 분석하면 희생은 절대 작지 않았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미국과 이를 막으려는 영국 간의 전쟁이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봉건적 지배에 맞선 시민혁명의 성격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혁명의 대명사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18세기에 한정 지어 프랑스 대혁명을 이해하기보다는 이후 19세기, 20세기까지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사를 함께 조망하는 것이 프랑스 대혁명은 물론이고 시민혁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